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19
----------	------

발의연월일 : 2020. 9. 8.

발 의 자 : 송옥주 · 양정숙 · 김영주
송재호 · 이수진^비 · 윤미향
박성준 · 김민철 · 전해숙
노웅래 · 김종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② (생략)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다만, <u>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